

韓,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민주 “입법권 침해”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민주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해야”
국힘 “한 권한대행 겁박하지 마라”
국조실장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며 적극 옹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나”며 “윤석열 시종2인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대통령경호처 수사 협조 조치 등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그는 “자신의 본분이 어딴지 깨닫길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계획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종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

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데도 한 권한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

겠다.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마라”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무슨 의도인가”라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목적을 높였다.

한편 박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부권은) 국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발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권위·전문성등 설명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단’이 19일 17명 법률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했다.

김이수 조선대법인 이사장(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각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소추대리인 실무 총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이자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박혁·이원재·김남준·장순욱·권영빈·서상범·이금규·김정민·김선휴·김현권·성관정·전형호·황영민(기수 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최 의원은 “김이수 이사장이나 송두환 전 위원장 두분 모두 헌법재판관을 역임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한 분들이니까 그 권위나 전문성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김이수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도 참여한 분 중 한 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광범 특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과 재판역량이 탁월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넘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고 독일에서 헌법과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소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새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20일 두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선출

“정권교체 예인·檢 독재 조기종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사진)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서 의원과 이숙운 고려대 교수에 대한 당무위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서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과 군사반란을 저지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기까지 쉼없는



으로서 후회 없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안정화하고 내실을 다지고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당의 약속을 검찰 해체를 통해 완성하겠다”며 “다가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12일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대표의 권위 후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의료계·정치권, 의료사태 해법 논의

의대 정시모집 앞두고 간담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

이달말에 있을 의대 정시모집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의대 정원, 의학 교육 등 의료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의료계와 정치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회의실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상임위원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이 시작된지 열 달이 지났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압적·권위적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고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면서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단 비대위원장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

민, 전공의, 의대생들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거듭 촉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은 ‘전공의 처단’이란 폭언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의료계업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고, 소아과는 206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책의 중단 없이 전공의, 의대생들은 내년도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으로 플랜B가 있다는 이후로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각 대학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수급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추진해온 정책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자산 증식 투자 수단, 금융시장으로 옮겨야”

국회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배임죄 구성 요건 완화 검토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중심으로 많이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올해 초만 해도 (정부 등이 상법 개정)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 고소·고발이 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이 정진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

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